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발행일 2023. 8. 2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중
요양 시설 임대 허용 정책
검토 내용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목차

목차	2
질의내용	3

질의내용

지난 4/6(목) 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현재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13(목) 보건복지부에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보건복지부는 5/1(월) ‘정해진 바 없다’는 회신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답변과 달리 7/19(수)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안) 공청회’를 개최해 ‘정해진 바 없다’던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과 관련한 연구용역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8/17(목),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역행합니다. 참여연대가 여러차례 해당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낸 이유입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재차 질의서를 보내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지난 7/19(수) 진행된 공청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요양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이유로, 요양시설 설치 기준을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서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의 임차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보건복지부가 ‘정해진 바 없다.’고 회신한 것과 달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참여연대의 질의서에는 ‘정해진 바 없다.’고 회신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공청회에서 요양 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기관과 시민사회, 그리고 노인 당사자들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기관 및 시민사회가 제기한 입소 노인 안전성 문제, 노인장기요양재정수지 악화 문제, 윤석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각계의 우려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양 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니 각 문항마다 주어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중 요양 시설 임대 허용 정책
검토 내용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발행일 2023. 8. 21.

발행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진석 교수)

담당 조희훈 간사 02-723-5056 joy@pspd.org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http://www.peoplepower21.org)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